제8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21세기 도약을 위한
세계화 전략
-Upgrade Korea-

세종연구소
2002
정보화에 대한 대응:
한국형 정보화전략의 모색을 위한 시론

1. 비취담


한국은 고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전기 통신연합(ITU)에 의해 세계 1위로 인정된 나라이다. 전국민의 61%가 휴
대본을 갖고 있다는 격자는 한국은 흔히 일본의 환상이란 둘째 서도 세계적 수준을 자랑한다. 제다가 세계 최초로 한국이 사용한 CDMA 방식의 어동통신 단말기와 장비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남아, 베트 남, 호주, 인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기타 정보산업의 분야에서도 메모 리 반도체나 ‘ITF-LCD’ 등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기업들이 세계적인 선두주자를 못한 것은 그 자체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두고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상태에서 한국은 2002년 한 일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IT이라는 세계적 위상을 주구축에 넣어 야할 것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소위 ‘한국형 정보화전략’이라는 개념적 아이템을 개발하여 향후 한국 정보화의 지침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게 입증의 ‘선행모델’으로 전파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곳은 단순한 정보통신의 차원을 넘어 사회과학적인 개념의 복합화를 융합함으로써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되어온 한국형 정보화전략의 실제화 내용을 세계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정보화 문의 국가전략의 방향을 도식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이미 한국형 정보화전략이라는 것이 있는가? 한국의 정보화전략에 ‘한국형’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가? 만약에 한국형 정보화전략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향후 한국의 정보화전략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 II. 정보화의 개념적 구조

정보화라는 용어는 정보사회화(情報社會化)라는 형태로서 1960년대 후 반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정보화의 변이인 infor-matization도 비영어권에서 고안된 말이기 때문에 영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영어권의 연구자들은 정보화(informationization)라는 용어보다는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이나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또는 정보시대(information age)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여기서 정보화라는 용어 또는 그에 대한 정의는 1970년대에 검 퓨티 및 정보통신 기술이 점차 확산되면서 일부 미디어작품의 저술을 통해 널리 소개되었고, 21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학술연구가나 정책보고 서 등에서 앞에 찾아볼 수 있는 용어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화라는 용어는 학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 순료간격의 개념으로 고안되고 사용되어온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엄밀한 개념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은 용어 중 하나이다. 논지들마다 정보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학계 전체가 합의하는 개념정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 정보화라는 것이 변화와 관계된 역사적 현상이라서이다. 이는 개인의 개인적 사고단위의 역할을 가집니다. 이들은 정보화의 개념적 구조를 논할 때 이 곳들 정보화에 대하여 염두에 두는 중요한 점이다. 오랜 한국의 정보화의 전략에 대한 도출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다른 정보화의 개념적 목적으로 정보화의 개념적 개념(operational concept)을 설정해 보자 한다. 이 과정에서 파악하는 정보화의 개념은 정보산업화, 시각정보화, 제조조정, 사회문화화, 글로벌정보화 등의 다섯 가지 개념적 측면으로 구성된다.

첫째, 20세기 중반 이후 정보화의 역사적 보면 정보화의 개념은 정보산업화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산업화는 다니엘 벨(Daniel Bell)이 1970년대 초반에 제기한 ‘산업화사회(post-industrial society)’라는 개념의 발레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보산업화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산업화의 단계가 제조업 중심의 단계로부터 ‘제조업화’ 또는 독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산업화의 개념은 신산업혁명의 핵심에 있으며, ‘제1의 산업혁명(전기기기 및 석탄에너지)’과 ‘제2의 산업혁명(전자기기 및 석유에너지)’의 개념적 연속성에서 파생된 ‘제3의 산업혁명(전자기기 및 석유에너지)’의 주기에 해당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산업화는 심층, 현장, 자동화, 우주항공 등의 산업에 대처하는 새로운 세계 경제의 전도부문(Leading sector)으로서의 정보산업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데, 20세기 후반 이후 이러한 정보산업에서의 성공은 국제경쟁력의 해심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정보산업에서 나타나는 주요 경향은 그 기술적 조정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로, 그리고 정보기술이 담은 전반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 이해되는 정보화의 개념은 ‘저작정보화’ 또는 ‘정보의 저작화’이다. 저작정보화로서의 정보화는 정보산업화보다는 긴 변화의 주기를 배경으로 하며 산업혁명의 단계를 넘어서는 점적으로 다른 국면을 상정한다. 예를 들어 얼빈 토피플(Alvin Toffler)의 말하는 ‘제3의 움직임(The Third Wave)’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토피플은 인류 역사의 변화과정을 일반 연간 농업혁명에서 시작된 ‘제1의 움직임’과 수백 년 전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제2의 움직임’을 거쳐 현재의 정보화를 ‘제3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물질적 자원 중심의 사회에서 기술, 정보, 지식 자원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전환을 논하였다. 제3의 움직임로서의 저작정보화는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라 정보를 생산, 수집, 분석, 수집하는 과정에서 열린 탐구식의 사회에서 정보의 저작이 늘어난다는 점에 따라 사회의 정보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정보화의 진행으로 저작정보화의 방향이 정보화가 정보화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의 정보산업화 및 저작정보화로서 개념화된 정보화는 중요한 의미의 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정보화의 개념의 대상 영역으로서 정보산업화가 정보화의 ‘공급단면’이라고 저작정보화는 ‘수요단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보산업의 육상이나 정보통신의 구축 및 정보화는 정보화의 핵심과 관련된 정보화의 개념의 조정과 동의에 있어의 안 되어. 중요한 의미의 정보화는 정보화의 개념적 구조를 방사로 이행할 경우, 〈그림1〉에서 이행적으로 드러나듯이, 수평 위에 더 있어 쉽게 보이는 것과 불과하다. 넓은 의미에서 정보화의 개념은 기술과 경제의 논리로 넘어가는 제도적 사회문화의 영역을 포함하는 형태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요한 의미의 정보화가 수반되며, 또한

![정보화의 개념적 구조 (방송의 비유)](image-url)
이를 축방하는 제도환경의 변화나 사회문화적 변동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정보화의 개념이 파악되어야만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정보화의 본질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풍부한 의미의 정보화와 넓은 의미의 정보화가 가르는 (그림)의 수면표면의 높이는 절대적인 분할선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되고 또 각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상대적인 분할선이다.

차례, 넓은 의미에서 정보화의 개념을 이해할 때 정보화는 정보산업화와 지식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융통시키는 조직과 제도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범어지는 '제도조정(institutional adjustment)'의 과정이다. 정보기술은 정보산업화의 과정에서 그 기술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과 제도의 거버넌스 구조를 의도적으로 '발집중 네트워크(decentralized network)'의 형태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저자정보화의 진전도 정보의 생산·유통·소비가 환원화된 과정은 정부 및 민간부문의 구조개혁을 촉진시키고 조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야기한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제3의 산업혁명'과 '정보화'는 조직과 제도와 관련한 '사회혁명'으로 근거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검증에서 정보화의 정보기술의 생산이나 활용 과정에서 국가나 기업 및 사회제도 등의 효율과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조정의 과정'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화란 정보기술의 생산이나 활용 과정에서 국가나 기업 및 사회제도 등의 효율성과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조정의 과정'과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넷째, 제도조정을 통한 사회변화에서 더 나아가 정보화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문화변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보화는 단순한 기업과 시장, 산업체제와 사회제도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변수를 넘어서는 보다 심층적인 사회문화요인에 의해 축방되고 융통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론적 사회문화변동으로서의 정보화는 각 사회의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구조성의 형태와 선택적 전환성의 관계를 가질 때 진행된다. 전통적 제도주의의 이행 시기에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가 소규모 균질적인 관계로 재편되였듯 정보화는 균질적인 개인과 공동체의 구성원들 내에서 새로운 '정보사회문화' 또는 '발접근문화'의 등장을 수반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최근의 사회문화적 연구들에 따르면, 정보화의 과정에서 균질적인 인간간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으로 통해 체계적 속에 몰리며 벌어진 개인의 행복세계를 복원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변동으로서의 정보화 개념은 앞으로 설정한 체계의 정보화 개념에 비해 가장 거시적인 변화의 추세를 상정한다.

이제, '글로벌정보화'로서의 정보화의 개념이다. 글로벌정보화는 여태까지는 세계적으로 국제적 차원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던 정보화의 문제가 이제는 국제적 차원을 넘어서는 글로벌정보사회의 이슈로서 부상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1990년대 중반부터 해도 정보화전략이라고 하여 주로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우위한 위치를 자세히 둔 데 주안점을 두었던 정보화를 극단적 국가간(International) 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제시된 글로벌정보화는 있을 때 알 수 있다. 실제로 세계경제의 변화를 상정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커뮤니언트 세계화와 정보화는 여태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정보화가 세계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는 국면에 정체되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국가간과 국제화의 추세는 국가들이 구성된 기존의 국제체계의 기본양태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동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다섯 가지 정보화의 개념은 일종의 이념형적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가 진행되어 구체적인 현실대로서 각 사회에서 그 체계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각 개념의 범주마다 다른 모습의 정보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섯 가지의 개념들은 양적인 차원에서 각 사회의 정보화 진전순도를 정량화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로인해 이러한 다섯 가지 개념의 범주와의 관점에서 한국 정보화의 성공과 한계 및 특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보려 한다. 극단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형 정보화진단의 성과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지역과 향후 한국 정보화의 전방향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III. 정보화에 대한 대응

1. '정보산업화'로서의 정보화에 대한 대응


한국형 정보산업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 정보산업의 발전은 수출지향의 정보통신부문 제조업이 주도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 정보산업의 국제경쟁력은 DRAM과 같은 메트리 반도체, TFT-LCD와 같은 모니터, 유비쿼터스 반도체와 같은 정보통신기기와 완성품 등의 제조업에 매우 강한 점을 중점하여 있었다. 이러한 정보통신부문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 은 편이지만 외국기업들과 비교할 때 생산성도 높고 경쟁력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2000년 기준으로 DRAM이 107억 달러, CDMA 달러가 8억 달러, CRT 및 LCD는 86억 달러 각각 수출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정보통신부문 제조업의 빠른 발전은 단계별로 기술수준에 딸린 분야에 집중하여 큰 수익을 올려서 다시 기술에 투자하여 이를 바탕으로 첨단 하이테크에 도전하는 데를 따라 지속적인 정보통신부문의 비중을 확대하고 기술고도화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분야에서는 로테크(low-tech) 제품에서 하이테크(high-tech) 제품으로 옮겨가는 형태를 띄웠으며, 부분간에는 메트리 반도체—LCD—
2. ‘지식정보화’로서의 정보화에 대한 대응


한편 이러한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여 행정·금융·공공·공안 등 국가기구 영역의 전산화가 추진되었다. 행정정보화 부문에서는 전자정부사업이 본부가 마련하여, 대통령의 1996년 12월 28일 기부제품에 참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대내외서비스 개선, 행정의 효율성과 무고성의 제공, 정부의 개방 등을 목표로 하는 행정공공의 전자정부사업이 확대되었으며, 행정정보화 사업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과 빅데이터를 위한 기업거래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정부는 e-비즈니스 관련 기술개발, 로스터,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공유 등 기업정보화의 공통 기반 협력을 조성하였고, 소기업 보조회계화 사업, ASP 보호확산사업, 3년간 중소기업정보화 지원 사업 등 전략산업의 정보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 의료, 교육 등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가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정보화의 위요한 범위로 확산된 후에는 농어촌정보화, 장애인정보화, 노인정보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식정보화의 다향벌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학술, 문화, 역사,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지식정보화의 정부가 지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노인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컨텐츠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정보수신소의 양적 확장을 위한 지원을 넘어 사이버테러,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보호, 악성, 전자서명인증 등을 다루는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형 정보화정책의 관점에서 지식정보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면지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으로 유선 및 이동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혜택적인 보급 등을 선도하여 정보통신 수요 확보 측면에서 성공을 거둔 후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급층에서 보급층으로 전교생산업으로도 교도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조율한 것이라고 드러난다. 그러나 공공의 관점에서 정보인프라와 디지털 컨텐츠의 양적 확충에 주안점을 두며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정보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그 활용도를 검토한 결과를 임하는 것으로 자극된다. 다시 말해 정보인프라와 전자정부와의 구도는 의외적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수요자로서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전자정부 활용도나 실제 기업의 e-비즈니스 수준도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앞서부터 주도적으로 지식정보화 분야에 투자한 이에 따라 기업들은 스스로로 정보화 정책을 위한 부담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기업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도 일부 과장된 가능성을 하향하여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 정보화분야가 구축된 사례에 의하면, 수요자로서의 요구를 보다 타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계의 자율적인 기업정보화 정책, 전자정부 컨텐츠 확장을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기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반조성에 실질을 씻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 ‘제도조정’으로서의 정보화에 대한 대응

정보화에 대한 ‘한국형 제도조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보화의
전과 정책을 통합하여 사례자주주도 정보화(state-led informatization)의 형식을 발견된다. 정보화 과정에서 국가나 기업 및 기타 정부 주체들이 정보화에 부담하는 제도환경의 쟁点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 보이지만 대체로 산업화기사에 제한된 제도적 대응의 폐단을 유지하는 영장상의 정보화의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접근하였다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한국의 정보화는 동아시아 개방국가 (developmental state)의 산업정책 마이크로 정보화에도 투영된 소위 “개발국가형 정보화”라고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발국가형 정보화의 경향은 정보화 추진과정에서의 정보통신유의 역할이나 과거 산업화 시기의 경제개발계획을 연상하게 하는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관행 및 초기 정보화 과정에서 시드 비니(seed money)의 역할을 한 정보화촉진기금의 조성 등에서 나타났다. 우선 1994년 12월 체
신부로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통신·방송·정보통신 관련 정책기능을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여 정보통신 수요정책(전지정보화, R&D)이 공격으로 주로 촉발되는 주요체제가 정비되었다. 이와 아울러 1990년대 중반부
부터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법정적으로 수립 및 수용되어 왔다. 1993년에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해당하는 『Cyber Korea 21』(1999)의 추진을 통해 IMF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제3

한편 이러한 정보화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하여 정보통신구축, 정보통신산업 부문의 R&D, 정보통신 전문 인력양성, 표준화 등 국가인프라 확장에 기여하는 정책의 주체로 정보화 과정의 ‘선순환 구조’를 잘 활용하였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조성할 당시
의 한국은 정보통신인프라구축, 단기정보화等因素에서 매우 뒤처져 있음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당국이 소관국의 직책을 놓고 국가가 소유한 통신사
업자들의 독창성을 훼손하여 정보통신산업은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
한 산업정책의 수단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을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하던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해 1993년부터 2001
년까지 고속도로 구축, 정보화 촉진, 정보산업 발전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총 7조 3,714억원을 투입하였다.
 정보산업의 육성이나 정보통신구축 및 디지털컨텐츠의 확장 등을
모두 정보부의 지원에 의해 계획·추진하였던 ‘한국형 정보화전략’은 적어도
이제까지는 결정전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형 정보화전략의 성공이 산업화와 정부는 부분을 폐하다던 정보
화의 초기단계를 넘어서 정보화의 성숙단계까지 이어졌다는 미수이다. 다시 말해 정보부의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기 등의 터널로 하던 단
계에서는 개발국가형 정보화전략이 효과적이었을지라도, 앞서 제시한 바
와 같이,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컨텐츠 등의 분야 정보화의 초반에 이르
한 경우에도 같은 해방이 없이 들어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보화
화적인 차원의 정보화 투자와 실질적인 생산성 증대에 이르기 위
해서는 정보화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제도의 구조적 변화가 논의된 수단
도 있다. 궁극적으로 정보화의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합조직과 기업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조정’이 필수적
아야 한다.

4. ‘사회문화변동’으로서의 정보화에 대한 대응

정보화와 전화성을 갖는 ‘한국형 사회문화변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
차적으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하였던 시민사회의 존재에서 인터
넷 확산을 이용하는 단주를 찾을 수 있다. 지금 출현에서 능동적 사회주약
운동이나 그 변인 인터넷 매체의 활용을 통한 시민사회운동 등의 활성화
는 근대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세력들이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에반하여 민주당의 국민경성과정에서 나타난 노사운동을 사용
하는 사람들의 모임 현상, 월드컵 과정에서 나타난 홍성아현상, 오
마이뉴스나 포레시안 등과 같은 인터넷 언론의 활성화 등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이르 근대적 이해관계(interests)의 변동을 비롯으로 형성된 시민
사회 또는 공론영역(public sphere)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력들이 정치사회적으로 동일되는 과정에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전통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드리려 한다. 약으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정치사회적 활동을 이어내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화의 경제적·수용성에서 데모 디케리와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정보화는 전통문화의 요소로 대비되는 한편의 독특한 사회문화요인이 된다는 영향을 미쳤다. 전통문화의 요소를 보면, PC방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공통체의 정체성 및 쟁점문화의 형성 등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보다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요소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용면, 자연, 학문 등의 연관주의적(통합적)의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해관계보다는 정체적 교감이나 아르니노(ideas)의 공동체를 통한 이들 등을 중시하는 한편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요인이 이들 정보화 세계의 확산·수용과 전통문화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School'과 같은 사회문화적otentiring의 성립에 있어서 인터넷화는 전통의 사회문화적 요인의 작용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른 한국의 사회문화적 혁신, 밀레니엄, 내부문화, 수용문화, 구체적·정형적, 독특의 경험식(idea)화 등이 사회화적·개선적(operationalization)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변화는 한국의 정보화의 전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보기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위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별도로 이어내고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한 형태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인터넷이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중단된 의사소통운동을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제어로 얻은 개인의 생활체계가 회복되는 것이 정보화로 인한 사회문화변동의 본질적인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화 과정이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특성은 이러한 관찰의 지평을 넘어 제재로부터 회복되는 근대적 개인의 생활체계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해관계에 의해 분리된 이차적전적인 개인의 경제체로서 구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정보화과정에서 회복된 개인의 생활체계는 개별적으로 재구성된다고 보다는 다양한 이차적단적인 소그룹의 형태를 띠면서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그룹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난해한 한국인은 정서적 안정감을 추구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공론영역의 가능성과 전통문화의 존중으로서 개인화되는 두 가지의 사회문화요소가 결합해서 형성된 소위 ‘이차적전’의 문화는 정보화의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는 앞서의 단계에 근대화 과정을 거쳐서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요소가 근대적인 요소와 합쳐되면서 형성된 사회경제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대적인 공론영역의 상속과 한국적 전통의 공통체 문화가 교차된 영역에서 한국 정보화의 가시적 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비판과도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 산업화의 과정에서 그러하였듯이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은 정보화의 과정에서 그 추진을 끝까지하는 소위 정보사회적 ‘아시아적 가치’로서 작용하지도 모른다.

5. ‘글로벌정보화’로서의 정보화에 대한 대응

‘한국형 글로벌정보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은 그 정보화의 수수께 감탄하는 대외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시아 정보인프라(API) 사무소를 국별에 유치하는 등 국가간 IT협력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트렌드사마시아 정보네트워크(INN) 사업을 제도화하였고, 아울러 아시아개방협력(APEC) 차원의 e-APEC의 건설 및 전자정부 협력사 업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APEC의 ASEAN+3 활동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이 디지털 사회화 구현을 주장하면서 각국 경상들의 농장이 만들어진 제반을 한 것도 의미있는 노력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국제정보사회세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외인터넷망용시단

제6장 정보화에 대한 대응 157
의 파견이나 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 관련 인력 조정 연수사업에서부터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도하는 DGF(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사업에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일정정도의 국제적 연합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속성에서 최근 완성된 'e-Korea Vision 2006'은 그런 정보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정보화의 실질적인 골로벌 리더로 경쟁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안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한국이 활발한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의 (이하 IT외교)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동안의 정보통신의 육성과 지식정보화의 성과를 바탕으로한 국가의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IT외교는 실제로 CDMA와 같은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경쟁력이나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과 같은 성공적인 정보화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부기술 분야의 현장에서 일어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보화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이를 이용한 IT외교를 통해 국내 정보산업의 대외진출 기회를 확대한 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통신기업들과의 기술협력의 기회도 증진하여 다

차원적 IT외교의 구상이 실현에 옮겨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 벌어진 한국의 IT홍보에액으로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었으며, послед연국제협력사업의 주도권 행사도 정보화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량과 이에 기반을 두고 IT외교의 추진을 후보로 해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대응하는 본격적인 IT외교전략의 추진이란 면에서 볼 때 한국의 정보화전략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식화되어야 할 것은 IT외교의 개념에 대한 정체성, 정체성의 이해부족이다. 산업사회시대의 '이반로그외
교(analog diplomacy)' 와는 달리 정보화시대의 '디지털외교(digital diplomacy)'는 정보기술이 정착하는 새로운 시공간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넓은 영역과 보다 많은 주체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모래림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래까지 이러한 전략은 IT 관련 통상확대와 기술협력 등과 같은 '글로벌 정보경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경쟁
을 지워하는 경제와 산업 위주의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간(또는 기업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규범과 질서의 확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게시되고 있는 IT허브국가론은 글로벌정보화 전
략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IT허브국가의 목표로 설정하기 위해서 한국의 정보화전략을 대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

d결함이 있음을 보완하면서 대내외적 역량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들은 고민하려는 중요한 계기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PI와 같은 

어려운 테라인의 정책공부 구축, 이·태지에서의 CDMA망 확성, 

동아시아 e-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정보산업의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의 구축 등과 같은 아시아의 연속선상에서 출발한 IT허브국가의 구상은 

두 가지 이유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류 경제의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측면을 고민한 것이 있어야 한 공간적 발전을 활용할 것이나의 문제를 재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내 단일국을 넘어서 남북한, 한·중·일·동북아3국, ASEAN+3의 같은 아시아 국가간 공동체, APEC이나 ASEAN과 같은 동아시아 쪽의 적자서한 지역공동체, 경쟁 상위의 글로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지리적 공간구도를 통해서 한

국의 정보화를 담당하고 IT허브가 될 것인가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탐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3차원의 중심국가(centro state)적

인 ‘사이버’ 허브국가의 발상을 넘어서 3차원의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벌

여지는 '전자상형' IT허브국가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경제의 이데올로기 타입성한 '부국강병(富国強兵)형 정보화전략'으로부터 글로벌화 대응의 차원에서의 협력과 공존을 전제로 하는 '부문별령(部門統領)'형 정보화전략으로 진화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제기가 될 것이다. IT

의 허브(hub)가 있다면 반드시 IT의 스포크(spoke)도 있기 마련이다. 그

련된 단계에 네트워크 환경을 전제로 하는 정보화의 분야에서 일반적인

허브와 스포크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차례차례 인도력을 역할

분담의 구도이다. 네트워크환경에서 허브는 한층 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의 담당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복합적인 하브가 공존하는 양상을 봐 볼 것이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의 시각상 IT하브전략은 협력과 공존의 전략, 소위 '원인(.win) 전략'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 IV. 빛깔

이 글은 정보화의 작업정책으로서 정보산업화, 지식정보화, 제도조정, 사회문화변동, 글로벌정보화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한국형 정보화전략이 갖는 성과를 평가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한국형 정보화전략은 논합에 있어 합리적 견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원에도 아직 정보화의 진행 중에 있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진행 중인 한방역으로서의 정보화 논합에 있어 '한국형' 윤리하는 것은 아직도 시가초명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소위 한국형 정보화전략의 모색을 위한 시론(論)을 벌쳐 본 것은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 정보화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다른한 한국사회의 발전정보를 따라서 나타난 '한국적 해법'의 연속성상이 있으며, 현실정치는 그 해법이 나름대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보화전략은 다소 가지면서 소위 '한국형'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정보산업화'의 관점에서 본 때, 한국형 정보화전략은 수출지향의 정보부문 제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자산성장력을 확보한 반면 소프트웨어 기술표준 등의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둘째, '지식정보화'와의 관점에서 본 때, 한국형 정보화전략은 정부가 주도가 되어 지식정보화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이나 디지털전환의 확장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산업의 수요를 촉발하는 선순환 구조의 형태를 떠었다. 셋째, '제도조정' 관점에서 본 때, 한국형 정보화전략은 산업화시기 동아시아 개발국가들의 산업정책적 미묘한 정보화에도 담관한 '개 발국가형 정보화전략'이었다. 넷째, '사회문화변동'의 관점에서 본 때, 한

국형 정보화전략은 전통적인 업무주의와 근대적인 시민사회의 성숙이 복합된 형태의 사회문화요인을 배경으로 하여 가능하였다. 다섯째, '글로벌 정보화'의 관점에서 본 때, 한국형 정보화전략은 정보기술 관련 품질적 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부국강병형 전략의 연속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형 정보화전략'이 앞으로도 급속히 정경계정의 정보기술의 세계에서 계속 효과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형 정보화전략은 산업화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정보화의 초기단계에서 그 실리성이 있었다. 정보산업의 하드웨어 부문이나 정보인프라 구축 등의 부분이 한국형 정보화전략이 갖는 성과를 응용하는 관점에서 시가초명일지도 모른다. 그 이유를 나열해 보자. 한국형 정보화전략은 고용을 높이게 하며 국가정책 및 사회구조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음으로 보였다. 다수국가는 글로벌 정보화의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형 정보화전략에 대한 변화와 조정의 요구는 대화적이고 보다는 한국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화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앞으로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이 글에서 제시한 시론을 제게 21세기 정보화전략과 기반방향을 설정하는 본격적인 학술적·정책적 토론이 시작되었으면 하겠다.
요약문

21세기 세계에서의 변화를 상정하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인 정보화(情報化)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한국이 성공적인 사례이라는 평가는 이제 더 이상 국내적인 자화자찬이란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성공적으로 뒷받에 놓아버리고 있는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이동통신의 확산, 매거진 방송이나 TFT-LCD 등의 생산, PC개입의 확산이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동체의 사회문화상품의 활성화는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이러한 연속성상에서 한국은 2002년 한일 공동공작계획을 편성하여 ‘IT코리아’의 세계적 위상임을 지구촌에 널리 알렸으며, 여기서 두 나라가 소위 ‘한국형 정보화전략’이라는 개념적 아이템을 개발하여 이후 한국 정보화의 지침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개방도상국들에게 일본의 '전형모델'로도 전파되었다는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이 글은 단순한 정책추진의 차원을 넘어 사회과학적 개별의 통합원활함으로써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되어온 한국형 정보화전략의 설계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하고 한국 정부와 분야에서 한국 국가정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한국형 정보화전략이라는 것이 있으나 한국정부정보학의 한국형 정보화전략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 가능성이 존재하며 가능성을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보화전략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지금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정보화의 과정을 바탕으로 정의되는 분야 전반을 돌아보며 좀 더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의 성찰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정보화를 정보산업화, 지식정보화, 제도조성, 사회문화변동, 글로벌정보화라는 다섯 가지 차원의 ‘작업개념(operational concept)’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정보화전략을 평가하고 그 특징을 밝혀 보았다.

한국의 정보화전략은 나름 가지 면에서 소위 ‘한국형’이라는 형태를 둔소 각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정보산업화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형 정보화전략은 수출지향의 정보부문 제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소프트웨어 기술포차 등의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둘째, 지식정보화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형 정보화전략은 정부가 주도가 되어 지식정보화를 위한 정보화 프라 구축이나 디지털전자신의 확장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산업의 수요를 축적하는 선순환 구조의 형태를 둔다. 셋째, '제도조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형 정보화전략은 산업화시기 동안에 개발국가들의 산업정책적 범위가 정보화에 중점을 지향한 개발가정 정보화전략이었다. 넷째, '사회문화변동'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형 정보화전략은 정보기술 관련 물질적 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부국강병 전략'의 연속성상에 있었다.

이러한 '한국형 정보화전략'이 앞으로도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세계에서 계속 효과적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형 정보화전략은 산업화와 증가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정보화의 초기단계로서 그 실패론이 있다. 정보산업의 하드웨어 부문이나 정보프라 구축 등의 부분이 한국형 정보화전략의 성과를 이론 영역에서 산업화과정을 뒤따는 한국형 개발국가가 한국사회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그 성공을 쟁취한 제도와 사회문화의 관점이다. 그런데 정보산업과 지식정보화 부분은 그 점이 정리로 소프트웨어와 반전즈 등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소위 '한국형'으로 치명적인 기업전략이나 국가정책 및 사회구조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보도한다. 단순하나 글로벌 정보화의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형 정보화전략에 대한 변화와 조정의 요구는 더해질지도 모른다.